

『사상계』에 나타난 과학기술의 표상*

- 1950년대~1960년대 초 남한 과학기술 담론의 한 단면 -

김상현**

〈차 례〉

1. 들어가며
2. 해방 전후 한국의 과학기술 담론
3. 『사상계』에 나타난 과학기술 담론
4. 나가며

【국문초록】

최근 한국학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담론이 사회·정치적 질서에 대한 집합적 상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다층적·다면적 관계를 맥락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남한의 과학기술 담론을 다루는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시기적으로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에, 내용적으로는 국가 정책과 과학자·공학자 사회의 공식적 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춰왔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시도로 1953년 창간부터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는 1960년대 초까지의 기간 『사상계(思想界)』의 과학기술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당대의 대표적 종합교양지였던 『사상계』에는 정치·경제·철학·사회·문화 등의 분야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글이 다수 게재되었다. 대중적 과학 잡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전공자가 아닌 지식인과 일반 독자에게 과학기술 관련 주제가 소통되고 논의되는 주요 대중매체 공간으로 기능한 것이다. 『사상계』의 지면에 실린 글들은 다양한 형식을 띠었지만, 과학기술을 근대화의 핵심 요건으로, 냉전의 전선이자 무기로, 그리고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5).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부교수

세 가지 담론적 흐름은 상이한 초점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을 무엇보다 부강한 국가의 건설을 위한 힘이자 도구로서 상상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주제어] 『사상계』, 과학기술, 근대화, 민족주의, 발전주의, 반공, 문화냉전

1. 들어가며

과학기술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이에 관한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역사·문화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그 배경에는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실천은 사회·문화·정치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내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국가, 지역이나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작동한다는 전통적인 실증주의 과학기술관의 수용과 내재화가 자리하고 있다. 많은 경우 전통적 과학기술관은 과학과 그것이 결과한 기술적 성과는 가치중립적이나 일단 사회에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기술결정론적 입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¹⁾ 이와 같은 이론적 전제가 반드시 과학기술을 역사·문화연구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문화적 분석의 초점을 과학기술의 제도화와 발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사회·문화·정치적 환경과 조건은 무엇인가, 이들의 발전은 어떠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하는가, 그로 인해 촉발된 (다분히 정해진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의 속도가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은 상징적 자원으로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가 등의 차원으로 국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과 민족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역사·문화적 연구는 보편적이며 가치중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민족주의에 의해 촉진되거나

1) 전통적 실증주의 과학기술관 및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 문헌 참고 Jan Golinski, *Making Natural Knowledge: Constructivism and the History of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위비 바이커 외, 송성수 역,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새물결, 1999; 송성수 편저,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녹두, 1995.

왜곡되는 양상 혹은 그러한 과학기술이 민족주의적 기획에 의해 담론적으로 소환되고 동원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좁혀온 면이 있다.²⁾ 이와 달리 구성주의적 접근을 채택하는 과학기술사·과학기술사회학 연구들은 과학기술 자체가 민족적 의식 및 정체성과 맞물려 공생산(coproduction)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³⁾ 이들은 국가와 문화적 경계를 횡단하는 인간, 지식과 자본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에도 과학기술의 의미, 가치, 목적과 역할은 민족됨(nationhood)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국민국가 건설 프로젝트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재)상상되어왔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연구들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민족적 상상이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실천의 내용에도 투영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지식과 실천이 민족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석을 생산하고 규율하는 권력 기술(technologies of power)의 구성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과학기술과 민족의 이처럼 얽힌(entangled) 관계는 선형적으로 규정될 수 없고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주어진 시공간 내에서는 자못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최근 한국학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담론이 민족적 정체성 등 사회·정치적 질서에 대한 집합적 상상을 배태하는 동시에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작동하는 다층적·다면적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식민지시기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⁴⁾ 해방 이후 남한에서의 과학기술 담론을 다루는 연구

2) Elisabeth Crawford,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in Science, 1880~193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Alan D. Beyerchen, *Scientists under Hitler: Politics and the Physics Community in the Third Reich*, Yale University Press, 1977.

3) Gabrielle Hecht, *The Radiance of France: Nuclear Power and National Identity after World War II*, MIT Press, 1998; Nadia A. El-Haj, *Facts on the Ground: Archaeological Practice and Territorial Self-Fashioning in Israeli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Sheila Jasanoff and Sang-Hyun Kim (eds.), *Dreamscapes of Modernity: Sociotechnical Imaginaries and the Fabrication of Pow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Edward Jones-Imhotep, *The Unreliable Nation: Hostile Nature and Technological Failure in the Cold War*, MIT Press, 2017.

4) 박지영, 「민족의 생명력: 미즈시마 하루오의 인구통계학 연구와 우생학」, 『한국과학사학회지』 42권 1호, 2020, 187~218쪽; 정준영, 「기획 서문: 식민지와 과학, 그 형용 모순의 관계를 넘어서기」, 『한국과학사학회지』 37권 1호, 2015, 199~207쪽 및 기타 수록 논문; 황종연 엮음, 『문학과 과학

들은 시기적으로는 박정희 군사정권(1961~1979) 시대, 내용적으로는 국가 정책이나 과학자·공학자 사회에 의해 제시되는 공식적 내러티브 혹은 과학 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의 전개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엘리트들의 담론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⁵⁾ 이들의 담론은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과학기술과 사회·정치적 질서가 공생산되어온 경로의 특성과 동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가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방향은 국가 기구나 과학자·공학자 사회의 담론 영역 밖에서 과학기술의 의미, 가치, 목적과 역할이 어떻게 이해되었고, 이러한 이해가 사회·정치적 질서에 대한 어떠한 상상과 연관되었으며, 그것이 다시 해당 시기의 지배적인 사회·정치적 질서 및 권력관계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향의 연구를 위한 초보적 시도로 이 글에서는 『사상계(思想界)』의 과학기술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950~1960년대의 대표적 시사 종합교양지인 『사상계』는 남한 지성계의 동향을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이 지면에서 개진된 여러 주제의 담론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⁶⁾ 그러나 『사상계』가 과학기술의 주제를 빈번하게 다루었다는 점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왔다.⁷⁾ 1950년대 초·중반에서 1960년대

1: 자연, 문명, 전쟁, 소명출판, 2013; 황종연 엮음, 『문학과 과학 2: 인종, 미술, 국가』, 소명출판, 2014; 황종연 엮음, 『문학과 과학 3: 영혼, 생명, 통치』, 소명출판, 2015.

5) 김태호 엮음, 김근배 외 지음, 『과학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 과학과 권력, 그리고 국가, 역사비평사, 2018;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자들의 탈식민주의 갈망: 한국의 현대적 과학기술체제의 기원』, 『역사와 담론』 75호, 2015, 179~222쪽; 문만용·강미화,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 '제도 구축자': 최형섭과 오원철』, 『한국과학사학회지』 35권 1호, 2013, 225~244쪽;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 1960년대 과학기술 지형』, 『역사비평』 85호, 2008, 236~261쪽.

6) 『사상계』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예를 들어 다음 문헌 참고,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권보드래, 『이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사상계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김미란, 『사상계와 아카데미즘, 그리고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 방식-1953~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8호, 2012, 193~234쪽; 윤상현,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1호, 2013, 47~83쪽; 박지영, 『냉전(冷戰) 지(知)의 균열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1950년대 후반~1960년대 전반기 『사상계』 변역 담론을 통해 본 지식 장(場)의 변동』, 『반교어문연구』 41집, 2015, 511~551쪽; 이상록,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7) 예외적인 사례로는 손남훈, 『『사상계』의 과학 인식과 <아이스만 견문기>의 비판 의식』, 『우리文學』

초의 기간 대중적인 과학 잡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상계』는 일간신문을 제외하면 전공자가 아닌 지식인과 일반 독자에게 과학기술의 주제가 소통되고 논의되는 가장 의미 있는 대중매체 공간이었다. 물론 『사상계』에 드러난 과학기술의 표상이 남한 지성계의 지배적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사상계』가 당대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지성계의 이념적·지적 지형도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부 주제와 필진의 선정, 글의 기획 등 편집 과정을 보여주는 일차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편집진과 주요 필진, 기타 필진 및 독자층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인식차를 확인하기가 다른 주제에 비해 더 어렵다는 점 등도 본 연구를 제약하는 걸림돌이다.⁸⁾ 그럼에도 『사상계』에 나타난 과학기술 담론의 분석은 국가 기구와 과학자·공학자 사회 외의 역사적 행위자들에 의해 과학기술이 어떻게 상상되었는가를 조명하는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우선 1945년 해방으로부터 『사상계』가 창간되는 195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과학기술 담론을 그 역사적 기원과 함께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구한말과 식민지시기를 거치며 뿌리 내린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비전은 남한 사회에서도 공고히 유지되었다. 이어 박정희 군사정권이 등장하는 1960년대 초까지 『사상계』에 나타난 과학기술 담론을 검토할 것이다. 『사상계』에는 과학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글들이 게재되었는데, 이들에서 과학기술의 의미, 가치, 목적과 역할이 어떻게 상상되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사상계』에서 부각되었던 한 가지는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한 근대화의 요건으로서의 과학적 사고와 방법이었다. 다른 한편 문화냉전과 미·소 우주경쟁

연구』 65집, 2020, 291~317쪽; 이선우,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9호, 2016, 261~302쪽; 김태호, 「1950년대 한국 과학기술계의 지형도」,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37~69쪽 참고.

8) 이와 관련해서는 「편집후기」, 「독자통신」, 「한마디 한다」, 「편집실 앞」 등의 코너를 참고할 수 있겠으나 과학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드물어 본 논문의 분석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의 전개에 따라 과학기술은 종종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대립의 전선으로 또한 냉전에서의 승리를 이끌 주요한 무기로 표상되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의 대두, 경제개발계획의 요구, 구미 발전경제학 담론의 유입 등을 경유하면서 냉전의 실체적 무기로서의 과학기술은 점차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로 번역되어 갔다. 이 세 가지 담론적 흐름은 서로 다른 초점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을 무엇보다 민족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힘이자 도구로서 상상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2. 해방 전후 한국의 과학기술 담론

한국의 근대 과학기술 수용은 서구와 일본이라는 강력한 ‘타자’로부터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이루어졌다.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단 기간에 서구 열강에 맞서게 된 일본의 모습에 감화를 받은 구한말 엘리트들은 근대화를 곧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전략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근대화에 대한 도구주의적 접근 내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와 군사력을 신장해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도구이자 국력의 원천으로 상상되었다.⁹⁾ ‘부국강병을 위한 과학기술’의 비전은 식민지시기에도 약화되지 않았다. 36년간의 식민통치 기간 비록 일본의 제국 건설을 위한 것이었고 억압이 뒤따랐지만, 조선이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과학기술 도입과 활용이 전개되었다. 총력전체제 시기(1937~1945)에는 ‘과학보국(科學報國)’과 ‘기술입국(技術立國)’ 같은 구호의 유포를 통해 일제의 민족주의적 과학기술 담론이 광범하게 확산된다.¹⁰⁾ 이러한 경험은 과학기술의 의미와 역할이 국가에 의해 정의된 발전 목표에 봉사하는 것에 있다는 대중적 인식을 강화해주었다. 이는 일제에 저항한 민족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일제 과학

9) Sang-Hyun Kim, “Science, Technology, and the Imaginaries of Development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6(2), 2017, pp.341~371 참고.

10) 일본 제국의 민족주의적 과학기술 담론에 관해서는 Hiromi Mizuno, 앞의 책, 2009 참고.

기술 담론의 기본 논리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과학적 계몽과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력 습득이 시급하다는 민족주의자들의 시각과 다른 성격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¹¹⁾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되고 조선이 해방되면서 마침내 부국강병을 위한 과학기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원자폭탄의 투하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켜주었다. 해방 직후의 과학기술 담론이 그리 단일했던 것만은 아니다. 여경구와 같은 일부 좌파 성향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이데올로기적,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과학기술의 활용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경고하는 등 사뭇 다른 내용의 과학기술 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¹²⁾ 그럼에도 헤게모니는 과학기술이 조선의 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관점에 있었다.¹³⁾ 1947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조국재건의 과학설계』의 소개글은 당시의 분위기를 가늠하게 해준다.

이번 전쟁에서 과학의 힘으로서 일본을 족쳐내인 원자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었는가. 우리의 살 길은 우리 조국을 부강하게 할, 단 한 가지는 과학의 힘이다. 아모리 정치적으로 독립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독립 없이는 다시 남의 노예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말 것이다. 과학기술의 총동원, 생산의 과학화, 건국의 기초가

11) Sang-Hyun Kim, 앞의 글, 2017 참고.

12) 여경구, 『과학기술의 진로』, 『인민과학』 창간호, 1946, 68~73쪽.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김동광, 『해방 공간과 과학자 사회의 이념적 모색』, 『과학기술학연구』 6권 1호, 2006, 89~118쪽.

13) 본 논문에서는 과학, 기술 및 합성어 ‘과학기술’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할 것이다. 서구의 지적 전통에서 과학과 기술의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지녀 왔지만, 양자 모두를 서구로부터 전래된 재(材) 혹은 기(器)로 파악한 동아시아의 도구주의적 접근에서는 그 의미가 그리 크지 않았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 같은 도구주의적 인식은 이후 ‘과학기술’이라는 합성어로 상징되게 된다. Mizuno가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 합성어의 확산에는 일본의 우파 기술관료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1930년대 일본의 과학 담론을 장악하고 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해 과학을 민족주의와 국가 주도 발전주의의 인식틀로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합성어 ‘과학기술’을 적극 유포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던 ‘과학기술’은 총력전체제 시기 식민지 조선에 광범하게 전파되었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대안적 시각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방 이후에도 널리 활용되기에 이른다. Hiromi Mizuno, 앞의 책, 2009 및 Sang-Hyun Kim, 앞의 글, 2017 참고.

되는 모든 부문의 과학적 설계와 과학적 건설만이 오직 사랑하는 조국을 자주독립의 반석위에 오르게 하는 길임을 새해부터 더욱 명심하며 그 실천을 위하여 기초를 쌓자.¹⁴⁾

하지만 이념 대립의 격화와 냉전의 고조로 남과 북에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고,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됨에 따라 이와 같은 비전은 재차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직후 남한의 상황은 어찌 보면 더 어려웠다. 주요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월북하거나 피랍되면서 과학자·공학자 사회는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이승만 정권(1948~1960)이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는 등 기술경제적 발전에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8년에 이르러서였다.¹⁵⁾ 그 이전까지 국가 재건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담론이 다시금 대두되는 기반이 마련되는 데는 오히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아시아 지역 자본주의 진영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미국의 냉전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 국무부의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는 1953년부터 기술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경제재건의 관계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을 높여주는 계기를 제공했다.¹⁶⁾ 1956년에는 소련의 영향력 견제를 배경으로 했던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프로그램 일환으로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미 협정이 체결된다. 이 협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1958년 원자력법의 제정과 1959년 행정부처 원자력원 및 종합 과학기술연구소 성격을 지닌 원자력연구소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시켰다.¹⁷⁾ 이러한 일련의 과

14) 『조국재건의 과학설계 (1)』, 『東亞日報』, 1947년 1월 1일, 3쪽.

15) 정진아, 「이승만정권기 경제개발3개년계획의 내용과 성격」, 『한국학연구』 31집, 2009, 353~386쪽.

16) 홍성주, 「전쟁과 전후 복구, 과학기술의 재건 (1950년대)」, 『과학기술정책』 22권 2호, 2012, 148~156쪽; 한봉석,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기술원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17) 김성준, 「1950년대 한국의 연구용 원자로 도입 과정과 과학기술자들의 역할」, 『한국과학사학회지』 31권 1호, 2009, 139~168쪽; 고대승, 「한국의 원자력기구 설립과정과 그 배경」, 『한국과학사학회

정은 남한의 과학자·공학자 사회가 국가 재건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이라는 비전을 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조직화에 나서는데 크게 기여했다.

3. 『사상계』에 나타난 과학기술 담론

그러나 일부 엘리트 관료들과 과학자·공학자 사회를 제외하면 남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공적 논의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의 시기 과학기술의 주제가 이를 전공하지 않은 지식인과 일반 독자에게 소통되는 주요 매체는 일간신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고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 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미국과 소련 간 우주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 경쟁이 전개되면서 과학기술 관련 주제를 다루는 보도, 사설, 기고, 좌담 등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¹⁸⁾ 하지만 일간신문의 한정된 지면을 넘어 과학기술에 관한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중매체 공간은 부재하다시피 했다. 전후 창간된 교양 과학 잡지들은 해방 직후 발행되었던 『대중과학(大衆科學)』, 『현대과학(現代科學)』, 『과학시대(科學時代)』 등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부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하게 된다. 더욱이 이 잡지들은 1954년과 1958년에 출간된 『과학발명(科學發明)』과 『과학세계(科學世界)』 정도를 제외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 독자층으로 하고 있었다.¹⁹⁾ 『사상계』는 1960년대 초 『신사조(新思潮)』(1962), 『세대(世代)』(1963), 『청맥(靑脈)』(1964), 『신동아(新東亞)』(1964, 복간) 등이 등장할 때까지 그러한

지』 14권 1호, 1992, 62~87쪽;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 20년사』, 1979.

18) 『한국일보』는 1958년 국내 일간지 최초로 과학부를 창설한다. 현원복, 『한국 과학 저널리즘 발전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참고.

19) 예를 들어 『과학 다이제스트』(1954), 『소년과학』(1955), 『어린이과학』(1957) 등을 들 수 있다. 전파과학사가 성인을 대상으로 1959년 창간한 잡지 『전파과학』은 1969년 『전자과학』으로 제호를 바꿔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그러나 무선전신·전기 분야에 특화된 잡지로서 대다수 지식인과 일반 독자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전파과학사가 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표명하며 과학기술 전반을 다루는 교양문고 『현대과학신서』를 출판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이다.

공백을 메워준 사실상의 유일한 종합교양지였다.²⁰⁾

『사상계』가 창간 때부터 과학기술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아니었다. 과학기술 기사가 자주 실리게 된 것은 일간신문과 마찬가지로 원자력과 미·소 과학기술 경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1956~1957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무렵을 기점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권영대(權寧大, 물리학), 강영선(姜永善, 생물학)과 이종진(李鍾珍, 화학)이 과학사, 과학철학 또는 주목할 만한 과학적 성과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는가 하면, 해외 저명 과학자의 글이나 해외 잡지의 과학기술 기사도 다수 번역된다. 1958년 이종진이 편집위원회에 합류한 이후에는 「과학과 생활」(1958.7~9), 「과학교실」(1958.11~1960.2), 「사이언스·스크랩」(1959.1~1960.3) 등 과학기술 상식과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연재물도 게재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과학기술의 의미, 가치, 목적과 역할에 관한 집합적 상상이 명시적으로 과학기술에 초점을 둔 글에서만 재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상은 과학기술의 세부적 내용에 관한 글보다는 과학기술과 사회 혹은 인류와의 관계를 조망하는 글에, 그리고 때로는 인문학, 전통, 근대화, 경제발전 등을 다루는 글에 더 흥미롭게 투영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 『사상계』에 나타난 과학기술의 표상은 식민지시기에서 해방 공간으로 이어져온 부강한 국가 건설을 위한 힘이자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이라는 상상을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강조점에 따라 근대화의 핵심 요건으로서의 과학기술, 냉전의 전선이자 무기로서의 과학기술,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이라는 상호 연결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근대화의 핵심 요건으로서의 과학기술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장준하(張俊河)를 필두로 『사상계』를 이끌었던 지식인들의 다수는 서북지역 출신이었으며, 안창호, 이광수와 최남선

20) 1950년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잡지인 『새벽』의 경우, 『사상계』에 비해 과학기술 관련 글이 훨씬 적게 실렸다.

등으로 대표되는 식민지시기 문화적 민족주의와 계몽주의의 사상적 계보와 연결되어 있었다.²¹⁾ 1920년대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은 당대 서구 지식인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던 과학기술관, 즉 과학기술은 물질적 진보의 토대일 뿐 아니라 전통적 위계질서의 초월적 권위에 도전하고 공적 이성에 기초한 근대적 사회·정치 질서를 확립함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라는 입장을 수용했다. 반면, 국가주의적 사회진화론에 의해서도 깊은 영향을 받았던 이들은 서구적 근대화를 곧 조선 민족을 열등하고 후진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부국강병의 국가 전략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의미와 가치는 물질적 진보가 제기되는 맥락이 아닐지라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비판적 이정보다는 부국강병을 가능케 할 민족의 힘이자 도구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되었다.²²⁾ 근대화와 그 핵심 요건으로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처럼 도구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인식은 『사상계』 지식인들에게도 계승된다. 『사상계』에는 한국 사회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을 개탄하면서 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근대화를 역설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실리는데, 이 중 상당수가 과학적 지식, 사고와 방법의 확산을 통해 국민을 계몽하고 사회제도과 관행을 바꿔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이 서북지역 출신 지식인들에 의해서만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으로 『사상계』 편집진과는 다소 결이 다른 지적·정치적 전통에 위치했던 배성룡(裴成龍)도 이를 공유했다. 『사상계』의 창간 이래 그가 기고한 일련의 글들은 한국 사회의 후진성이 동양문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타개하고 민족의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배성룡에 의하면 삶과 사회의 물질적·경제적 측면을 경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력배양과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동양적 사유방식을 깨뜨리는 데는 “과학에 입각한 『인간』을 먼저 인식케 하는” 계몽과 교양

21) 김건우, 앞의 책, 2003.

22) 예를 들어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歐州 先進國이 우리보다 優越한 것은 이 科學的 知識의 普及에 있는 것이오 우리가 그만 못한 것은 科學的 知識이 그네만 못한 까닭이다 (중략) 우리의 進路는 以上の 所論으로 이미 決定되었을 것이다, 即 全民衆에게 科學的 知識을 普及하는 大運動을 니르켜야 할 것이다.” 이광수, 『민족적 경륜 (4)』, 『東亞日報』, 1924년 1월 5일, 1쪽.

의 확산이 급선무였다.²³⁾ 따라서 “현대의 진보성과 복잡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국가를 영도하고 발전”시키는 “민족생명의 노력은 널리 자연과학 지식의 보급에 최대역량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과학적 지식과 분석은 “선민들의 장신구나 유희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우열을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국력의 근간이며,²⁴⁾ 이들에 입각한 체계적인 방법과 논리가 결여된다면 설사 인적·물적 자원이 있더라도 국가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⁵⁾ 경제평론가였던 배성룡은 이후 후진국 종합개발책을 검토하면서 미국 뉴딜 정책의 TVA(테네시 강 유역개발) 사업을 한국이 참고할만한 사례로 높이 평가하는데, 이를 자본주의의 무계획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인간 진보의 표상”으로 묘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²⁶⁾

『사상계』의 발행인이었던 장준하 역시 여러 차례의 권두언을 통해 과학이 근대화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1955년 4월의 권두언 『현대화의 거점』에서 그는 근대화의 요체는 과학적 사고와 방법에 의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조직을 체계화하는 것인 만큼 근대화의 모태는 과학 사상이라고 주장한다.²⁷⁾ 그러므로 과학화는 “민족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고 근대화로 나아가는 경로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現代化라는 것은 科學化를 意味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矛盾됨이 없는 合理 適當한 法則을 發見하고 그 法則을 어긋남이 없이 지키고 그 法則에 矛盾이 생길 때에는 또한 가장 合理的이고 明確한 方法으로 研究하고 整理하여 나아갈 수 있는 政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며 確然한 基礎가 서야할 것이며 우리 民族이 지닌 歷史와 文化는 우리 民族 發展의 基礎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民族의 歷史와

23) 배성룡, 「동양인의 인생관」, 『사상계』 1호, 1953, 43~52쪽.

24) 배성룡, 「우리 민족성과 동양학-주로 동양학 연구 동기에 대하여」, 『사상계』 9호, 1954, 51~59쪽.

25) 배성룡, 「방법과 논리-그 학술상·생활상 미치는 영향」, 『사상계』 32호, 1956, 79~91쪽.

26) 배성룡, 「후진국종합개발책-아시아 제국의 전력·관개문제 등 동시해결안을 논함」, 『사상계』 34호, 1956, 36~49쪽.

27) 장준하, 「권두언: 현대화의 거점」, 『사상계』 21호, 1955, 6~7쪽.

우리 民族의 文化가 科學的으로 分析되고 整理되고 體系化되어 이것이 우리 民族의 現代化的 據點이 되어야 합니다.²⁸⁾

장준하는 1959년 3월의 권두언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에서도 민족을 세우고 사회를 바로 잡는 애국의 길에서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 과학적 방법임을 천명한다. 이어 그는 “과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연후라야 우리가 바라는 이념의 태동을 볼 수 있고 나라 살림의 올바른 설계도 기대할 수 있으며 참다운 재건과 부흥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창했다.²⁹⁾

의외인 것은 실존주의 철학을 설파했던 『사상계』 지식인들도 과학적 사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다. 근대적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를 야기하고 있다는 회의와 성찰에서 연유한 실존주의는 한국전쟁과 그 직후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남한 지식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³⁰⁾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실존주의의 수용 과정에서 누락되고 있었다. 실존주의가 한국에 소개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박종홍(朴鍾鴻)은 『사상계』의 1957년 6월 좌담회에서 “과학문명의 편중”이 끼칠 해독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³¹⁾ 실존주의에 관해 여러 글을 발표한 바 있고 편집위원으로 좌담의 사회를 맡았던 안병욱(安秉煜)도 과학문명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실현에 주력하여 한국의 빈곤과 후진성을 모면하는 것이야말로 과제가 아니냐고 반문한다.³²⁾ 박종홍은 이후의 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대과학의 전통을 가지지 못한 우리”로서는 “당장에 시급한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여 새로운 건설에 이바지하는 중책”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과학사상을 섭취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실존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법철학자 황산덕(黃山德)

28) 장준하, 앞의 글, 1955.

29) 장준하, 「권두언: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상계』 68호, 1959, 14~15쪽.

30) 나종석, 「1950년대 실존주의 수용사 연구 - '교양'으로서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혜계연구』 27호, 2010, 241~273쪽.

31) 박종홍 외, 「좌담회: 문학자·철학자가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좌담회 -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사상계』 47호, 1957, 240~268쪽.

32) 박종홍 외, 앞의 글, 1957.

의 견해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1959년 2월 『사상계』의 ‘한국과 근대화’ 특집에 기고한 글에서 과학기술적 근대화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빨리 근대화의 길을 걸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과학의 발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단언했다.³⁴⁾

2) 냉전의 전선이자 무기로서의 과학기술

근대화를 향한 『사상계』 지식인들의 열망은 그들의 반공주의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고 있었다. 남한의 성공적 근대화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이 근대화의 핵심 요건이라는 표상은 애초부터 냉전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과학기술과 냉전은 그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미국은 자유진영 국가의 지식인과 대중들에게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문화냉전 프로그램을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했는데, 과학기술도 예외가 아니었다.³⁵⁾ 그 저변에는 자유로운 지적 탐구와 토론을 본령으로 하는 과학과 그에 의존하는 기술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연적인 친화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과학적 자유를 억압해 리센코(Lysenko) 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미 국무부 산하 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USIA)나 아시아재단, 포드재단, 록펠러재단 등 민간재단의 방송, 도서 보급 및 출판·번역·교육·학술활동 지원은 이러한 이해의 전파가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함축하고 있었다.³⁶⁾ 이들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던 반공주의 성향의 트랜스내셔

33) 박종홍, 「실존철학과 동양사상—특히 유교사상과의 비교」, 『사상계』 61호, 1958, 36~45쪽.

34) 황산덕, 「사대적 카리스마와 동양의 재발견—인간의식의 근대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상계』 67호, 1959, 26~35쪽.

35)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문화냉전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 Audra J. Wolfe, *Freedom's Laboratory: The Cold War Struggle for the Soul of Scien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8; Audra J. Wolfe, *Competing with the Soviets: Science, Technology, and the State in Cold War Ameri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널 조직 문화자유회의(Congress for Cultural Freedom)도 산하에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과학과 자유 위원회’를 조직하고 과학기술과 자유민주주의의 친화성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전체주의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선전해 나갔다.³⁷⁾

과학기술을 둘러싼 문화냉전은 『사상계』의 지면에도 나타났는데, 주로 번역물과 해외 소식을 다루는 글들을 통해서였다. 『인류의 양심』(1956.10~11), 『인류의 지성』(1956.12~1957.8), 『지식의 전선』(1957.11~1958.7)과 같은 번역 연재물과 The Atlantic Monthly, Foreign Affair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Encounter, Der Monat, Commentary 등의 해외 잡지로부터 번역된 기사에는 미국과 유럽의 과학자, 인문학자와 지식인들이 과학기술의 정치·철학·사회적 함의를 언급한 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58년 1월에는 The Atlantic Monthly의 부록 ‘A Forward Look at Science and Industry’에 실린 10여 편의 글이 『과학과 명일의 세계』라는 특집으로 번역 게재되기도 한다.³⁸⁾ 이 글들은 각기 성격을 달리 했으며 경험적이고 모든 독단을 거부하는 과학은 곧 자유주의의 지적 대응물이라는 러셀(Bertrand Russell)의 주장과 유사한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³⁹⁾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과학기술의 진보는 세계의 풍요와 평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잘못된 정치체제, 즉 공산주의 체제로 인해 그 잠재력이 위협 받고 있다는 냉전적 시각을 드러내는 글들도 적지 않았다. 국제

36) Audra J. Wolfe, 앞의 책, 2018.

37) 문화자유회의에 대해서는 권보드레,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1950-19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 『아세아연구』 54권 2호, 2011, 246~288쪽; Peter Coleman, *The Liberal Conspiracy: 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and the Struggle for the Mind of Postwar Europe*, Free Press, 1989 참고. 문화자유회의의 과학과 자유 위원회에 관해서는 Audra J. Wolfe, “Science and Freedom: The Forgotten Bulletin”, *Campaigning Culture and the Global Cold War* (Giels Scott-Smith and Charlotte Lerg, eds.), Palgrave Macmillan, 2017, pp.27~44; Elena Aronova, “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Minerva, and the Quest for Instituting ‘Science Studies’ in the Age of Cold War”, *Minerva* 50, 2012, pp.307~337 참고.

38) 편집부, 「특집: 과학과 명일의 세계」, 『사상계』 54호, 1958, 188~287쪽.

39) 버틀랜드 러셀(梁炳鐸 譯), 「철학과 정치」, 『사상계』 13호, 1954, 56~72쪽. 러셀은 문화자유회의의 과학과 자유 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Hugh Wilford, “Unwitting Assets?: British Intellectuals and 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Twentieth Century British History* 11(1), 2000, pp.42~60 참고.

정세 동향을 전하는 코너 『움직이는 세계』에 간간이 실린 과학기술 기사들 또한 대부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차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있었다.⁴⁰⁾

『사상계』의 편집위원회가 번역물을 선정하고 기획함에 있어 과학기술의 문화냉전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상계』는 종종 번역물을 국내 원고의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⁴¹⁾ 그럼에도 이들의 원문이 처음 출판된 맥락이나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은 미국 문화냉전 전략의 자장 안에 놓여 있었다. 번역물의 출전 중 Encounter와 Der Monat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화자유회의의 영국과 독일 지부의 기관지였고,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문화자유회의로부터 독립적이었지만 산하의 과학과 자유 위원회와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⁴²⁾ 『인류의 양심』과 『인류의 지성』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이 USIA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라디오 시리즈 ‘New Frontiers of Knowledge’의 원고를 취사선택해 번역한 것이었다.⁴³⁾ 『지식의 전선』의 출전은 1956년 미국에서 출판된 편저서 Frontiers of Knowledge in the Study of Man의 챕터들이었는데, 주한 미 공보원은 USIA의 사업 예산으로 『사상계』의 번역 작업을 지원했다.⁴⁴⁾ 이 연재물들을 비롯하여 『사상계』에 실린 과학기술 관련 번역물 저자들의 면모도 특기할만하다. 이들 중 당대의 저명한 과학자로 국제 과학계에 영향력이 컸던 브리지먼(Percy W. Bridgman), 물리(Hermann J. Muller), 콤프튼(Arthur H. Compton),

40) 예를 들어 편집부, 『움직이는 세계 : 비중이 커가는 과학자의 위치 : 오펜하이머 등의 경우』, 『사상계』 47호, 1957, 274~276쪽.

41) 김성한, 『주간이라는 직함과 아름다운 추억』, 『사상계』 120호, 1963, 274~276쪽.

42) Patrick D. Slaney, “Eugene Rabinowitch,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nd the Nature of Scientific Internationalism in the Early Cold War”, *Historical Studies in the Natural Sciences* 42(2), 2012, pp.114~142.

43) Arnold Toynbee (ed.), *New Frontiers of Knowledge : A Symposium by Distinguished Writers, Notable Scholars & Public Figures*, Public Affairs Press, 1957; Trevor Rockwell, “New Frontiers of Knowledge :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Late 1950s American Cold War Propaganda”, *Past Imperfect* 15, 2009, pp.359~398.

44) 차재영, 『1950년대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와 의미』, 『한국언론정보학보』 78호, 2016, 206~242쪽. 냉전 시기 주한 미 공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허은, 『1950년대 ‘주한 미 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과 지향』, 『한국사학보』 15호, 2003, 259~227쪽 참고.

도브잔스키(Theodosius Dobzhansky), 오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 프리쉬(Otto Frisch) 등은 문화자유회의가 195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한 ‘과학과 자유’ 학술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했거나 이후 문화자유회의의 활동에 관여해온 인물들이었다.⁴⁵⁾

이상의 번역물들이 과학기술이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음을 부각시켜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소련의 괄목할만한 과학기술 발전 특히 1957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은 이들이 때로 직접적으로 때로 우회적으로 드러냈던 과학기술과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친화성 주장에 타격을 주었다. 1954년에 이미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한 러시아계 미국 과학자 터커비치(John Turkevich)의 글을 접한 바 있는 『사상계』 지식인들도 스푸트니크 이후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⁴⁶⁾ 편집위원인 유창순(劉彰順)과 김상협(金相浹)은 1958년 4월 좌담회 『우리사회와 문화의 기본문제를 해부한다』에서 과학기술이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에 회의를 표했다.⁴⁷⁾ 창간 5주년을 기념해 『사상계』가 개최한 과학진흥강연회에서 정치학자 이용희(李用熙)는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한다.

자유스러운 탐구활동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保障해주는 자유세계에서만 진정한 과학의 발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本性을 歪曲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自律의인 탐구열을 조장시키지 못하는 獨裁主義의 社會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암묵간에 인정하고 있었다. (중략) 原子核武器 競争

45) 이들의 글은 다음과 같다. 부리쾨먼, 『과학과 미래의 전망』, 『사상계』 39호, 1956, 292~295쪽; J. R. 오펜하이머(李鐵柱 譯), 『과학과 현대』, 『사상계』 44호, 1957, 74~76쪽; H. J. 물러(李鍾求 譯), 『전환하는 생물학』, 『사상계』 47호, 1957, 124~128, 145쪽; T. 도부찬스키(李鍾求 譯), 『인간의 본질(상)』, 『사상계』 52호, 1957, 254~262쪽; A. H. 콕프튼(李始豪 譯), 『인간의 자유』, 『사상계』 54호, 1958, 189~196쪽. ‘과학과 자유’ 학술회의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190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했다. *Science and Freedom: The Proceedings of a Conference Convened by 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and Held in Hamburg on July 23~26, 1953*,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1955.

46) 존 터어키 빗지, 『소련 과학의 진출』, 『사상계』 13호, 1954, 80~91쪽.

47) 윤세원 외, 『좌담회: 우리사회와 문화의 기본문제를 해부한다』, 『사상계』 57호, 1958, 260~288쪽.

이 오랜동안 美·쏘간에 문제가 되어왔어도 쏘련의 위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나라는 본질적으로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體制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중략) 이러한 종래의 信念이 작년 十月부터 뒤흔들리기 시작했다.⁴⁸⁾

따라서 과학기술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드높이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이를 지켜내는 문화냉전의 전선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스푸트니크의 충격을 지나면서 과학기술은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냉전의 실체적 무기, 즉 “한 나라의 물리적 힘”으로 표상되어 갔다.⁴⁹⁾

3)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

같은 글에서 이용희는 과학기술은 더 이상 과학 자체의 탐구나 개별 연구자의 차원에서 접근될 것이 아니라 “국가 목적”에 근거해 “방대한 자본투입과 막대한 시설제공”이 이루어지는 “국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부연한다.⁵⁰⁾ ‘국력’의 의미는 물론 군사와 경제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남한이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있었던 만큼 『사상계』 지식인들의 관심은 후자로 집중되었다. 후진성 탈피를 위한 근대화와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이라는 이들의 목표는 점차 남한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추구로 수렴되어 갔고, 그의 성취를 곧 한국 민족정체성의 핵심 지표로 상징하는 ‘발전민족주의(developmental nationalism)’가 자리를 잡아갔다.⁵¹⁾ 근대화의 핵심 요건이자 냉전의 무기로서의 과학기술이라는 표상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던 부국강병을 위한 과학기술의 비전도 과학기술을 발전민족주의 기획의 기본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후 침체되어 있던 과학자·공학자 사회가 1958년 초 원자력법 제정

48) 이용희, 『과학과 현대정치: 과학을 지배하는 정치와 정치를 지배하는 과학』, 『사상계』 59호, 1958, 53~62쪽.

49) 이용희, 앞의 글, 1958.

50) 이용희, 앞의 글, 1958.

51) Sang-Hyun Kim, 앞의 글, 2017.

즈음을 계기로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 담론을 적극 제기하고 나선 것도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민족주의적 관점이 강화되는데 기여했다.⁵²⁾ 문교부 기술교육국의 초대 원자력 과장으로 원자력법의 준비를 책임졌던 윤세원(尹世元)이 법 제정 직후 『사상계』에 기고한 글 「국가와 과학」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과학기술의 “진정한 의의”가 “국가의 부강”과 “세계사에서의 자기 나라의 위치를 확고히”하는 것에 있다면서 과학기술을 “국력을 신장시키는 국민경제의 자본”으로 규정했다.⁵³⁾

『사상계』에는 1958년 하반기 이후에도 원자력을 주제로 한 글이 자주 등장하는데, 1959년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고 미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용 원자로가 최초로 도입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글들은 원자력의 기술적 측면이나 관련 국내·국제 동향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을 위한 힘이자 도구라는 시각을 드러내곤 했다. 1959년 3월 「국내의 움직임」 코너가 원자력원의 발족을 두고 “발전예의 무한한 의욕을 가진 신생한국이 과학의 정도를 몸에 지니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 한 예이다.⁵⁴⁾ 그 해 6월 연구용 원자로의 기공식을 앞두고 “현대과학과 한국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조직한 좌담회의 제목이 “우리도 잘 살아보자”였다는 점도 『사상계』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암시한다.⁵⁵⁾ 이와 같은 인식은 원자력에 관한 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장준하는 1958년 9월의 권두언 「자주·자립의 축진을 위하여」에서 “국력의 기초”인 국민경제가 자립적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經濟生活에 自立을 얻은 국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만이 强盛하게 될 수 있다.

(중략) 우리의 技術陣을 멸시하고 外人들의 技術만을 盲信한 結果로 생기는 無用한

52) 김성준, 앞의 글, 2009; 한국원자력연구소, 앞의 책, 1979.

53) 윤세원, 「국가와 과학」, 『사상계』 58호, 1958, 210~221쪽.

54) 편집부, 「원자력원의 발족」, 『사상계』 68호, 1959, 145~146쪽.

55) 윤세원 외, 「좌담회: 우리도 잘 살아보자—원자로도입을 계기로 생각나는 현대과학과 한국의 미래」, 『사상계』 71호, 1959, 218~235쪽.

建設은 없는가. (중략) 援助經濟로 이루어지는 나라 살림인지라 恒常 被動的 位置에 서게 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겠으나 衆知 衆能을 모아 科學的 實證과 면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모든 건설사업에 보다 自主的인 地位를 爭取하여야 함은 우리의 애절한 冀願이다.⁵⁶⁾

자립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과학기술 역량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관한 글들은 『사상계』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민족주의적 인식이 나타나는 또 다른 공간이었다. 1959년 6월의 원자로 좌담회에서 윤세원은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를 거론하며 경제학자들이 국가 발전에서의 과학기술의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⁵⁷⁾ 하지만 성창환(成昌煥), 이정환(李廷煥) 등 『사상계』의 경제 분야 필진들이 지니고 있던 과학기술 인식은 윤세원의 발전민족주의적 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국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업화를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국·공영화나 공업화의 우선순위 등 이견이 없지 않았으나 ICA의 기술원조에 대한 의존을 넘어 기술인력 확충과 자립적인 산업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⁵⁸⁾ 윤세원이 비판했던 산업개발위원회의 황병준(黃

56) 장준하, 「권두언 : 자주·자립의 축진을 위하여」, 『사상계』 62호, 1958, 16~17쪽.

57) 윤세원은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경제학자만 가지고 경제가 발전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려면 과학자들의 아이디어와 구상과 프래닝을 많이 참작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 산업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개발이 이 기구의 목적인데 여기에 자연과학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략) 경제학자들이 과학자들을 불신하고 있는 증겁니다.” 윤세원 외, 앞의 글, 1959.

58) 예를 들어 성창환, 「빈곤에서의 해방—경제안정과 번영의 길」, 『사상계』 41호, 1956, 207~214, 233쪽; 이상구, 「국제수지개선책—무역수지를 중심으로」, 『사상계』 65호, 1958, 127~133쪽; 이정환, 「신경제정책에 기대한다—정책기반을 정비하라」, 『사상계』 87호, 1960, 154~161쪽; 이창렬, 「한국경제체제의 진로」, 『사상계』 92호, 1961, 100~109쪽. 『사상계』의 경제개발 담론에 대해서는 박태균, 「1950·60년대 경제개발 신화의 형성과 확산」, 『동향과전망』 55호, 2002, 75~109쪽; 김보현,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 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 개발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 『정치비평』 10호, 2003, 345~380쪽;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담’의 개발담론」, 『사학연구』 105호, 2012, 321~364쪽; 윤상현,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동국사학』 57집, 2014, 541~577쪽 참고.

炳俊)이 공업화를 논의한 글들도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차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⁵⁹⁾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김동일(金東一), 김종주(金鍾珠), 김문휘(金文輝) 등 대학과 기업의 공학자들이 산업 현장의 요구에 기초해 기술인력 양성, 산업기술 개발 지원과 이를 위한 행정체제의 쇄신을 역설한 것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⁶⁰⁾ 산업화와 경제발전 관련 글들이 과학기술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암묵적이었지만, 공업화의 구체적인 현황 및 과제와 결부되면서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서 각인시키는데 오히려 효과적인 면이 있었다.

『사상계』의 이러한 인식은 식민지시기 국가 주도 산업화의 경험과 사회주의 운동이 남긴 유산 그리고 소련의 사회주의적 발전 모델에 호의적이었던 인도 등 제3세계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의해 일면 영향과 자극을 받았지만, 구미의 발전경제학 담론으로부터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⁶¹⁾ 1950년대 중·후반 경부터 너시(Ragnar Nurkse), 루이스(W. Arthur Lewis), 틴버겐(Jan Tinbergen), 뮌르달(Gunnar Myrdal) 등의 발전경제학 이론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는데, 『사상계』의 경제 분야 필진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⁶²⁾ 발전경제학 담론의 확산과 그에 따른 공업화 논의의 활성화는 경제학 분야 외에서도 산업기술 진흥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었고, 과학기술을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직결시키는 관점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발전경제학 담론은 또 국민국가를 공통의 목표를 지닌 경제공동체의 기본단위로 표상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접근으로 연결되기가 용이했다. 1960년 『사상계』가 연재한 로스토우(W.W. Rostow)의 『비공산당선언: 경제성장단계설』이 그러한 사례였다.⁶³⁾ 로스토우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

59) 황병준, 「한국 공업화에의 의욕」, 『사상계』 80호, 1960, 126~135쪽.

60) 김동일, 「한국의 공업과 기술의 현황—주로 기술자 대책에 관하여」, 『사상계』 59호, 1958, 63~71쪽; 김종주, 「동력원의 현황과 전기—수력, 화력, 원자력이용」, 『사상계』 90호, 1961, 215~223쪽; 김문휘, 「기술인이 본 현장권의 산업정책」, 『사상계』 94호, 1961, 118~127쪽.

61) 박태균, 「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 경제개발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Tae-Gyun Park, "Different Roads, Common Destination: Economic Discourses in South Korea during the 1950s", *Modern Asian Studies* 39(3), 2005, pp.661~682.

62) 박태균, 앞의 논문, 2000.

발도상국의 엘리트들이 민족주의적 발전 전략을 채택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조직화와 동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상계』에 이미 나타나고 있던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민족주의적 인식과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물론 발전경제학 담론 내부에는 상이한 조류가 존재했으며 이들이 『사상계』 지식인 개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각기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발전경제학 담론은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이라는 집합적 인식이 형성되고 뿌리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 나가며

전술한 김문휘의 글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시기 『사상계』의 과학기술 담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4.19혁명으로 출범한 민주당 장면 정권이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민주진영이 공산진영보다 우월함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면에는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외면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흥과 기술부흥은 “일신동체”인 만큼 과학기술 진흥을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문휘는 또 이에 실패한다면 “경제부흥의 실효거양(實效擧揚)은 커녕 선진국가의 산업기술 후좌(後座)에서 먼 낙오자를 면치 못”하고 “암흑경제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⁶⁴⁾ 편집위원이었던 이종진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그는 4.19혁명 직후 산업계 종사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산업기술인구락부(韓國産業技術人俱樂部)의 대표간부로 활동했는데, 이 단체는 당시 장면 정권의 부흥부가 준비 중이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과학기술 진흥의 문제를 경시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고자 『산업부흥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63) 윌트 W. 로스트, 『비공산당선언(上)-경제성장단계설』, 『사상계』 78호, 1960, 147~162쪽; 『비공산당선언(中)-경제성장단계설』, 『사상계』 79호, 1960, 317~327쪽; 『비공산당선언(下)』, 『사상계』 80호, 1960, 100~108쪽.

64) 김문휘, 앞의 글, 1961.

다.⁶⁵⁾ 이 보고서에서 이종진은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경제부흥을 성공시킬 수 없으며 국가가 주도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산업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⁶⁶⁾

그러나 이들의 제안이 수용되고 실행에 옮겨진 것은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에서였다. 김문휘는 자신의 정책 권고가 실현되려면 “명치유신과 같은 혁신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5.16을 예고한 셈이었다.⁶⁷⁾ 쿠데타 세력의 혁명공약은 『사상계』의 발전민족주의의 기초와 상통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장준하가 5.16을 “국가의 진로를 바로 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으로 높이 평가하고 “혁명 정권이 치밀한 과학적 설계와 불타는 실천력을 가지고 모든 과제를 해결해 나아”가리라 기대를 밝힌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⁶⁸⁾ 실제 1961년 9월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 홍종철(洪鍾哲)이 내놓은 경제재건을 위한 과학기술의 종합관리 방안은 김문휘나 이종진이 주장했던 변화의 방향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다.⁶⁹⁾ 이는 이종진과 같이 활동했던 한국산업기술인구락부 구성원 일부가 국가재건최고위원회의 기술관료로 등용되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종진은 또 권영대 등과 함께 문교사회위원회의 종합과학기술연구소 설립 논의에 관여하기도 했다.⁷⁰⁾ 1962년 1월에는 『사상계』 경제 분야 편집위원 성창환과 이정환이 성안에 참여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발표되었고, 5월에는 그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이 발표된다.⁷¹⁾ 창간 이래 『사상계』가 펼쳐왔던 과학기술 담론, 즉 근대화의 핵심 요건으로서의 과학기술, 냉전의 전선이자 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무기로서의 과학기술, 이 두 측면을 수렴한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이라는 비전이 부분적

65) 이종진의 한국산업기술인구락부 활동에 대해서는 홍성주,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등장, 1945-1967』,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참고.

66) 이종진, 『산업부흥에는 기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산업부흥의 문제점』(한국산업기술인구락부 편), 한국산업기술인구락부, 1961, 1~6쪽.

67) 김문휘, 앞의 글, 1961.

68) 장준하, 『권두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사상계』 95호, 1961, 34~35쪽.

69) 홍종철, 『경제재건을 위한 노동력 및 과학기술의 종합관리』, 『최고회의보』 2호, 1961, 54~58쪽.

70) 홍성주, 앞의 논문, 2010.

71) 정진아, 앞의 글, 2012; 박태균, 앞의 논문, 2000 참고.

이나마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상계』는 군사정권의 정책 행보에 대한 견해차로 내부 분열을 겪게 된다. 1962년 7월의 권두언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에서 장준하는 군사정권의 “의욕의 과잉과 체계화되지 않은 혼합경제정책”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이전에 “정부가 먼저 과학하여야 한다”고 비판했다.⁷²⁾ “과학적인 사회-국가일수록 더 부강”하다는 시각을 전제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민족주의적 접근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군사정권이 발전민족주의 기획의 적절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반면, 이종진, 성장환, 이정환 등은 군사정권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협조를 지속해나갔다. 결국 1962년 10월 『사상계』 편집위원회가 대폭 재구성되고, 이들 모두 편집위원회에서 교체된다.⁷³⁾ 유일한 과학기술계 편집인이었던 이종진이 물러난 영향 때문인지 이후 권영대, 강영선 등 과학기술자들의 기고도 뜸해져갔다. 이러한 부침 속에서 『사상계』는 기존에 지면을 통해 제시해왔던 발전민족주의적 과학기술 담론의 주도권을 상실해갔고, 남한의 지식인과 대중들에게 과학기술 관련 주제를 소통하는 주요 공간으로서의 위치도 약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민족주의적 담론은 곧 박정희 정권의 공식 정책담론 일부로 등치되는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

『사상계』에서 과학기술 관련 기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편집위원회가 개편되면서 한국일보 과학부 기자 이종수(李鍾秀)가 담당한 「상식인의 과학 메모」(1962.10~1964.1) 코너가 신설되었고, 이따금 미·소 간의 우주 혹은 핵무기 경쟁에 대한 기사도 지면에 등장했다. 1965년 1월에는 「과학세기의 전망」이라는 특집이 기획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지식의 경이」(1968.1~12), 「학문의 열쇠」(1968.2~7) 등의 과학기술 연재물이 게재된다. 그러나 개편 이후 마지막호 1970년 5월호에 실린 특집 「전자사회로 가는 언덕에 서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과학기술 기사는 세부 분야의 최신 동향

72) 장준하, 「권두언: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 『사상계』 109호, 1962, 30~31쪽.

73) 정진아, 앞의 글, 2012.

을 소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는 제한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과학기술의 의미, 가치, 목적과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지닌 글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간혹 실리는 경우에도 지배적인 과학기술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과학세기의 전망』 특집에 실린 러셀, 지그프리트(André Siegfried)와 이만갑(李萬甲)의 글은 어느 정도 다른 시각을 담고 있는 예외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었다.⁷⁴⁾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주장했듯이 발전민족주의적 상상과 차별화된 과학기술과 발전에 관한 대안적 관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 다른 매체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⁷⁵⁾

따라서 1962년 후반부 이후의 시기, 그것이 지배적인 발전민족주의적 상상과 공명하는 것이든 혹은 그의 대척점에서 있는 것이든, 국가 기구나 과학자·공학자 사회의 공식 담론 영역 밖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상계』 외에 『신사조』, 『세대』, 『신동아』, 이들보다 비판적 성향을 지녔던 『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그리고 『기독교사상』 등의 잡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962년 10월 편집위원회 개편 이전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까지의 시기 남한 사회의 과학기술 담론 형성에서 『사상계』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 물론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대 남한 사회의 담론적 질서에서 『사상계』가 접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추가적으로 계획 중인 동 시기 일간신문과 기타 출판물의 과학기술 담론 연구는 본 논문의 분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사상계』에 수록된 문학 작

74) B. 러셀, 『양자택일 시대의 전쟁과 사회: 과학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인류생존의 길』, 『사상계』 142호, 1965, 172~179쪽; A. 씨그프리트, 『기술문명의 방향: 기술·교양·문명 관계』, 『사상계』 142호, 1965, 180~186쪽; 이만갑, 『과학세기의 인간관계: 과학적인 조직과 획일을 탈피하려는 인간존재』, 『사상계』 142호, 1965, 194~201쪽.

75) 김상현, 『박정희 정권 시기 저항 세력의 사회기술적 상상』, 『역사비평』 120호, 2017, 316~346쪽; 김상현, 『1960~1970년대 초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과 ‘근대화’와 ‘발전’의 정치』, 『한국학연구』 53집, 2019, 275~310쪽.

품들에서 과학기술의 의미, 가치, 목적과 역할이 어떻게 상상되었는가에 대한 분석도 『사상계』 지면에 나타난 과학기술 표상의 다양성과 혼종성을 검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⁷⁶⁾

7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손남훈, 앞의 글, 2020 참고.

■ 참고문헌

- 권보드래,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 김성보·김예림, 『분단시대의 얇은 체제』, 해안, 2016.
- 김미란, 『사상계와 아카데미즘, 그리고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 방식 - 1953~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8호, 2012, 193~234쪽.
- 김보현,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 정권과 얼마나 달랐나?: 개발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 『정치비평』 10호, 2003, 345~380쪽.
- 김상현, 『박정희 정권 시기 저항 세력의 사회기술적 상상』, 『역사비평』 120호, 2017, 316~346쪽.
- _____, 『1960~1970년대 초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과 '근대화'와 '발전'의 정치』, 『한국학연구』 53집, 2019, 275~310쪽.
- 김성준, 『1950년대 한국의 연구용 원자로 도입 과정과 과학기술자들의 역할』, 『한국과학사학회지』 31권 1호, 2009, 139~168쪽.
- 김태호, 『1950년대 한국 과학기술계의 지형도』, 『여성문학연구』 29호, 37~69쪽.
- 박지영, 『냉전(冷戰) 지(知)의 균열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 -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전반 『사상계』 번역 담론을 통해 본 지식 장(場)의 변동』, 『반교어문연구』 41집, 2015, 511~551쪽.
- 박태균, 『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 경제개발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_____,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사상계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 손남훈, 『『사상계』의 과학 인식과 <아이스만 견문기>의 비판 의식』, 『우리文學硏究』 65집, 2020, 291~317쪽.
- 윤상현,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1호, 2013, 47~83쪽.
- _____,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동국사학』 57집, 2014, 541~577쪽.
- 이상록,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9호, 2016, 261~302쪽.
-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105호, 2012, 321~364쪽.
-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 유광태·임채원 역,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2016.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 20년사』, 1979.
- 홍성주,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등장, 1945~1967』,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Peter Coleman, *The Liberal Conspiracy: 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and the Struggle for the Mind of Postwar Europe*, Free Press, 1989.
- Sang-Hyun Kim, "Science, Technology, and the Imaginaries of Development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6(2), 2017, pp.341~371.
- Giles Scott-Smith and Charlotte Lerg (eds.), *Campaigning Culture and the Global Cold War*, Palgrave

Mcmillan, 2017.

Audra J. Wolfe, *Competing with the Soviets: Science, Technology, and the State in Cold War Ameri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3.

_____, *Freedom's Laboratory: The Cold War Struggle for the Soul of Scien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8.

The Represent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asanggye*

– An Aspect of the South Korean Discours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1950s and the early 1960s –

Sang-Hyun Kim*

Recently,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there is a growing body of research that contextually examines the 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relationships in which the discourse of science and technology simultaneously reflects and constitutes collective imaginaries of the socio-political order. However, the analysis of the discours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ostcolonial South Korea has tended to focus mainly on the era of the Park Chung Hee military regime, and also on the official narratives of the national policies and of the scientific and engineering communities. As a modest attempt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discours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asanggye* during the period from its inception in 1953 to the early 1960s when the Park regime came to power. *Sasanggye*, the leading magazine of the time, not only covered political, economic, philosophical, social, and cultural issues, but also published a range of articles directly and indirectly dealing with the top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bsence of popular science magazines, it served as an important public media space in which the issues of science and technology were communicated and discussed among non-scientist

* Hanyan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Comparative History and Culture, Associate Professor

intellectuals and general readers. While the writings in *Sasanggye* took various forms, they frequently represented science and technology as a key requirement for modernization, as the front and weapons of the Cold War, and also as engines of national development. Despite differing foci, these discursive framings shared a common vision that conceived science and technology primarily as a form of power and an instrument to achieve a wealthy and strong nation.

Key words: *Sasanggye*, science and technology, modernization, nationalism, developmentalism, anti-communism, cultural Cold War